<도전 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석유화학 불황과 가격담합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땅에 떨어진 제품 가격을 끌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HDPE 관련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HDPE 생산 8개사는 지난 몇달동안 영업부장 회의를 열고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 담합에 의해 내수가격을 톤당 2만~3만원씩 일제히 인상,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및 담합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합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관련기업들은 HDPE 가격을 종전대로 인하해야 함은 물론 공개 사과해야 하고, 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 석유화학기업들은 가격 원상회복이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석유화학 기업들은 처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HDPE 가격인상을 담합으로 판정,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즉, 앞으로 LDPE · LLDPE · PP를 비롯 각종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땅바닥에서 건져올려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명시할 경우, 앞으로 가격 인상 노력조차 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폭락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유야무야성 시간끌기로 판단을 보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굳이 외면한 채 판결을 유보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인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한두개 기업이나 업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특히 석유화학은 재벌을 끼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들이 무지막지한 돈 투기를 벌여 막무가내식 신 · 증설에 몰두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봐줄(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내 석유화학 현상은 그 어느 누구의 강요나 사회 · 경제적 필요성에 따른 산물이라기 보다는 기업 그리고 산업계 자체가 안고 있는 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표출된 것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삼성 · 현대의 신규 투자를 탓하기 보다는, 기존 유공 · 대림의 「형님 · 선배 노릇 못하기」, 럭키 · 대한유화 · 호남 · 한양 등의 무리한 투자 및 경쟁력 저하에서 오는 필연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일층,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적당한 이익을 얻으며, 여기에서 얻은 이윤을 유보해 투자함으로써 규모화를 이루고, 그 규모화를 바탕으로 사업계열화 및 전문화를 추진,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게 원리원칙이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85년이후 91년까지의 호황기에 매출액의 20~30% 수준의 이익을 남기고서도,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투자자금으로 유보하지 않고 주주들끼리 나눠먹거나 엉뚱한 곳으로 자금을 유출해버려,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도 자기자금 비율이 30%를 훨씬 밑돌고 — 형식상으로는 정부의 지도비율 30%를 상회하지만 내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빚잔치를 벌여가면서 힘자랑에 여념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황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정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까지 투자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또다시 보호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격인상책은 정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40~50%의 공급과잉이 표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공급을 줄이기 위한 가동률 조정에는 아무런 염사도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 동시 시행에 들어간 것은 누가 보아도 담합행위가

분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들이 아픔을 감내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지경에서 가격만을 인상, 정상화시키겠다는 엉뚱한 발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년여동안 공급과잉과 이에따른 가격폭락 사태에 대처, 공급을 줄일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고 그 방법으로 나프타 공급을 제한하는 정부의 일정선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가동률을 15% 줄일 경우, 내수와 수출을 50대50으로 보아, 30%의 감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석유화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이러한 바탕이 뒤받침되지 않는 인위적 행동 통일은 사회가 용납키 어렵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모두가 자성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다.

<화학저널 1993/7/5>